

中·北關係 전망

인쇄/1997년 11월 5일

발행/1997년 11월 1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환경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08-7

4,000원

연구보고서 97-04

中·北關係 전망

신상진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북간에 관계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미간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미·북관계의 변화는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북관계 개선과 이에 따른 중·북관계 변화는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보고서에서는 한·중수교와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의 중·북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미·북 관계개선 이후 중·북관계 변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1. 한·중수교 이후 중·북관계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한을 한편으로 부담요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전처럼 체제유지 지원대상,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중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중·북한간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손상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중국은 한·중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계속 최소한도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군사교류를 확대하였다. 중국은 胡錦濤 정치국상무위원 등 비중있는 지도자들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며, 북한군 지도

부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과 에너지 제공정책을 지속하고 청산결계에 의한 무역거래 방식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는 중·북관계에 일부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江澤民과 李鵬 등 최고 지도부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간에 상호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중수교 이전까지 양국 최고지도부간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중·북한관계가 정치적으로 소원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에 나타났던 입장차이를 통해서도 중·북한간 정치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정치분야와는 달리 군사·경제분야에서는 중·북한관계에 큰 변화가 야기되지 않았다. 중·북한간 고위 군사지도자간에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군사동맹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의 대북 체제유지 지원정책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가 지속되었으며,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2. 미·북 기본합의 이후 중·북관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붕괴와 한·소수교, 한·중수교로 인하여 조성된 국제고립을 타개하고 경제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던 북한의 입장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불안을 사전 예방하고 사회주의국가의 민주화를 촉진시켜 세계 유일패권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하였던 미국의 입장이 절충되어 미·

북한간 관계개선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중·미간 세력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중수교 당시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는 바, 공식적으로는 동북아 및 한반도질서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북한 핵문제 타결과 미·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미·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는 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지를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다.

미·북 관계개선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세력범위내에 묶어 두려 하는 한편, 한국과의 정치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행보를 견제하려 하였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보를 보장받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과 북한의 이중적인 정책은 양국 관계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치·외교면에서 중·북한관계에 변화가 야기되었는데, 북한의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 철수 요구, 중국의 4자회담 참여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 鄧小平사망시 북한의 애도기간 미설정 및 북한의 대대만 관계개선 움직임 등을 통해서 중·북한간 정치·외교관계 소원화 징후가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군사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군사·안보적 협력을 과시하였지만,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 철수와 중·북한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중 자동개입조항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입장 그리고 1950년 한국전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재평가 움직임은 중·북한간 군사관계가

더 이상 혈맹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었다. 1995년 이래 북한이 수재와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를 겪게 되어 체제존속의 위기를 맞게 되자 중국은 무상 식량원조와 원유 제공을 통해 북한에서 체제안정이 유지되도록 지원하였다. 1996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약 250만톤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에 제공된 식량이 50만톤을 상회하였는 바,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3. 미·북관계 변화 이후 중·북관계 전망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수출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관계개선 협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동결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제1기 경수로를 건설 중에 있는 등 1994년 제네바 합의가 큰 장애없이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4자회담과 미사일회담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조만간 미·북간 관계개선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세기내에 미국과 북한간에 전면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EDO가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경수로 공사 완공시기와 북한의 잔류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철거시기가 2005년 경으로 예상되고 있고, 북한이 자본주의 사상 침투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동아시아지역 주

둔 미군 10만명을 2010년경까지 계속 잔류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북간 국교정상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2000년 이후에 가서나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3년 이내 미·북관계가 연락사무소나 무역대표부 개설단계 이상으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북관계 변화는 중·북관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江澤民 지도부는 미·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기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도 대미관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경제난을 해소하고 체제위협 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중국과 미국에 대한 등거리정책을 통해 실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북한관계 변화 이후 중·북한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단계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체제변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단지 경제지원 유도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막대한 경제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미·북관계의 급진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북한은 인접국이며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대미 협력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대만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한, 중국과 미국은 당분간 지역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모

색하게 될 것이다. 중·미간 갈등국면 완화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이며, 북한의 대중·미정책 변화 여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미관계의 완화는 어느 정도 중·북간 기존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간 지리적 인접성도 양국간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순치관계」(唇齒關係)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고립상황에 처한 북한도 인접한 중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정치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안정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북 관계정상화 단계에서 중·북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2000년 초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경쟁으로 중·미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북한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되게 되면, 북한은 대중(對中) 편향정책을 전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미 어느 일방에 치우치는 정책보다 중·미에 대한 등거리정책 채택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미에 대한 등거리정책을 통해 중·미 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게 될 것인 바, 미·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진영에 경도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초 중국의 경제규모가 대폭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경쟁국인 미·일의 영향력하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나 일본 군대

가 한반도 38도선을 월경하여 북한영내로 진격하는 상황을 수용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병력을 파병하는 경우에도 1950년 당시와는 달리 제한적인 군사력을 중·북한 변경지역까지만 파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북관계 정상화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협력정책을 전개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간 관계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정치·안보관계 개선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안보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행보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주요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배려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증대 차원에서 대북관계를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중·북관계는 전략적 이익 공유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 목 차 -

I. 서 론	1
II. 한·중수교 이후 중·북관계	5
1. 중국과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	5
가. 중국의 대한수교 배경과 의도	5
나.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	10
다. 북한의 대중 인식	16
2. 분야별 중·북한관계	18
가. 정치관계	19
나. 군사관계	25
다. 경제관계	28
3. 소결: 정치관계의 소원화와 군사·경제협력관계의 지속	32
III. 미·북 기본합의 이후 중·북관계	34
1. 미·북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34
가. 미·북 관계개선 합의	34
나. 중국의 인식과 정책	37
2. 분야별 중·북한관계	41
가. 정치관계	41
나. 군사관계	48
다. 경제관계	51
3. 소결: 정치·군사관계의 변질과 경제지원의 확대	53

IV. 미·북관계 변화 이후 중·북관계 전망	56
1. 미·북관계 변화 전망	56
2. 중·북관계 전망	59
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단계	59
나. 미·북 관계정상화 단계	63
V. 결 론	67
참고문헌	70

I. 서 론

1990년대의 국제질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과거 냉전시대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미·러간 냉전적 대립이 해소되었고, 중국과 베트남 등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앞다투어 자본주의체제의 장점을 도입하고 있다.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잔존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 모색은 과거의 사회주의국가들과 서방진영국가들간 관계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봉하는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는 국가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게 되었고, 경제적·안보전략적 이익 공유 여부가 국가간 관계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에 비해 냉전적 유산의 청산이 지지부진한 동아시아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러간의 대립구도가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냉전시대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중·미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와 중·일간 안보협력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중·러간에도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북한과 주변 4국간의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선 소련과 중국의 정책변화가 한국의 대(對)중·소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하였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전개하여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는 바, 동북아의 신흥 경제대국 한국도 당연히 소련의 협력 파트너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 이래 경제건설을 최우선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해 온 중국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적 필요성과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관계개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한·중수교는 한국에게는 북한과의 외교적 경쟁에서 승리 쟁취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중국에게는 남북한 모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반면, 한·중수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대(對)중·소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대(對)미·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에서는 외교적으로 비대칭적 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경우처럼 공식적으로는 반대해 왔지만 남북한에 대한 주변4국의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기를 내심 기대해 온 북한에게 크나 큰 외교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권력승계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자기의 아들이 정권 수립이래 가장 험난한 국제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했다. 북한 김일성은 과거 적대국으로 규정하였던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김정일에게 이념적·외교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였으며, 대(對)미·일 관계개선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김일성은 1990년 5월 제9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미(對美) 관계개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로써 미·북한간 정부차원의 접촉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 일본과 수교교섭 협상을 진행하여 수교문제에 상당한 접근을 이루었으며, 1997년 8월에는 北京에서 수교협상 예비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정책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장애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자신의 체제유지에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일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였다. 미국은 한·중수교 이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추세에 대처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 안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연착륙정책(軟着陸政策, soft-landing policy)을 채택하였다.¹⁾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수준을 차관보급으로 격상시키고, 1994년 10월에는 제네바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할 경우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등 미·북간 진실보한 관계진전은 북한의 체제적·경제적 부담과 4자회담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으나, 동아시아질서 변화추세와 미국과 북한의 의도를 고려할 때 향후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자신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발전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에서 미국에 대항해서 함께 피를 흘린 북한과 아직도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을 야기하는 원인의 하나가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1)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은 「개입과 확대전략」의 연장으로써 북한을 개혁·개방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동·태평양 질서 안에 편입·흡수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Warren Christopher, "U.S. National Inte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Address before the National Press Club, July 28, 1995, p. 1.

보여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미·북관계 개선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북관계 개선은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로 시작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경우 남북한에 대한 중·미의 영향력 확대경쟁이 더욱 표면화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며, 중국도 대북정책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북관계 변화는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북관계 개선과 이에 따른 중·북관계 변화는 중·미관계, 일·북관계 및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먼저 1990년대 중·북한관계 전개과정을 살펴 보기 위해 1992년 한·중 수교이후와 1994년 미·북기본합의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정치·군사·경제 분야별 중·북한관계를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정책 채택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미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 움직임으로 중·북한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향후 미·북한 관계개선 이후 중·북한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중·북한관계 변화가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한·중수교 이후 중·북관계

한·중수교 이후의 중·북한관계는 한·중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수교 이후 분야별 중·북한관계 변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중국과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중국과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

가. 중국의 대한수교 배경과 의도

1992년 8월 한·중수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질서 변화의 산물인 동시에 동북아질서 변화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되어 중국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하게 된 것은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탈냉전기 동아시아 질서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냉전체제 붕괴이후의 신국제질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되도록 하는데 외교정책의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²⁾

1989년 6.4 天安門사건 이래 중국에서는 점진적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鄧小平의 급진개혁 노선이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중국의 점진적 개혁론자들은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 붕괴라는 국제적 환경(國際大氣候)의 변화와 개혁·개방정책 채택이후 중국에서 출현하였던 각종 부작용(國內小氣候)으로 중국의 사회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완화할 것을 역설하였다.³⁾ 北京의 정치무대는 陳雲, 姚依林, 鄧力群 등 보수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연료한 鄧小平은 1978년 이래 자신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던 개혁·개방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鄧小平은 자신의 개혁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992년 봄 上海, 廣州, 深圳, 珠海 등 동남부지역 「경제특구」(經濟特區)를 순시하면서 경제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주창하였다. 鄧小平이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北京에서 上海 등 동남부지역에 내려가 경제개혁을 역설한 것은 1965년 毛澤東이 北京 정치무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劉少奇 등 당권파를 공격하기 위해 上海의 「文匯報」 등 매체를 활용한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⁴⁾ 1992년 당시 鄧小平은 1978년 이래 자신이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중국의 국력신장이라는 현대화 목

2) 중국에서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냉전체제 붕괴이후 동북아 신질서 구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저서로는 杜政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pp. 296~298; 馮特君 主編, 「當代世界政治經濟與國際關係」(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 등이 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수용 가능성과 관련」(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4) 毛澤東은 1965년 당시 국가기구나 당내에서 劉少奇와 鄧小平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자신의 세력기반이 약화되자 上海의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北京의 정적을 공격하였다. 이로써 毛澤東이 사망한 1976년까지 10년동안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지속되었다.

표실현도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등 급진적 개혁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경제발전이 중국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인식하여, 경제개혁·개방 가속화를 역설하였던 것이다.⁵⁾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대외적으로도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1989년 중국이 天安門사건을 무력으로 진압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내 인권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중국상품의 수입쿼타를 감축하고 중국내 정치범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첨단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최혜국대우 연장을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일본을 위시한 선진 경제국들도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은 상당한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신흥 경제대국인 한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1991년 무역 대표부 교환설치 이후 한·중 양국간 교역규모가 58억달러로 대폭 확대되어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한국과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교역 다변화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처하는 동시에 일본의 대중 투자와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⁶⁾ 당시 일본의 대중 투자는 일본 해외투자 총액의 1%에 불과하였으며, 1987년 이후 일본의

5) 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잘 나타난 문건은 “在武昌,深圳,珠海,上海等地的談話要點,”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5), pp. 370~383.

6) Hong Liu,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November 1993), p. 1091. 한·중수교 직후인 1992년 10월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관계강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일본 천황의 중국방문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대중 기술이전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은 일본의 대중 경제정책을 결코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⁷⁾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중국 동북삼성지역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하여 일본이 누리왔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였다. 중국이 한국과의 조기 수교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을 자극하여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급진개혁과 지도부의 의사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는 대만에게 외교적 고립을 가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서둘렀다. 당시 대만의 李登輝 총통은 대내 정치개혁과 대외 「탄성외교」(彈性外交)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려 하였고, 1992년초 라트비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니제르와도 국교를 재개하였으며,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등 외교적으로 상당한 개가를 거두었다. 당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대만의 유일한 수교국이었던 바, 한·중수교와 한·대만관계의 단절은 대만의 「쌍중승인정책」(雙重承認政策)과 「탄성외교정책」(彈性外交政策)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당시 대만의 최대 수교국이었던 한국에게 대만과의 국교단절을 요구하는 대신 조기 국교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일국양제」(一國兩制) 구상을 현실화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⁸⁾

셋째로는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차원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단행하였다는 것이다. 1990년대초 동아시아에서는 소련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유일 패권국 미국이 지역주둔 군사력 감

7) *Beijing Review*, December 23~29, 1991, p. 14.

8) 중국은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조기 국교정상화를 수용하는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중대한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하였다. Parris H. Chang, "Deng's Last Stand on China's Reform M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p. 124.

축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걸프전 당시 막대한 전비를 제공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데 대한 반발로 역내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天安門사건과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됨으로써 대만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1991년 1월부터 북한과 수교교섭을 전개하고 캄보디아에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⁹⁾ 일본은 아직도 과거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신질서가 미국의 협력과 지원하에 일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구축될 가능성을 경계하였던 것이다.¹⁰⁾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압력과 지역 정치대국화를 기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였다. 중국은 과거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주변국들과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기도를 완화·차단하고자 하였다. 1991년 11월 중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12월에는 인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동남아 국가들과도 빈번한 방문외교를 통하여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경쟁관계를 보여 온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공동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국카드를 이용하여 미국

9)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결정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人民日報」, 1992. 6. 11 참조.

10) 일본의 신국체질서 구상에 대한 중국의 견해에 대해서는 杜政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 pp. 314~323 참조.

의 압력을 완화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¹⁾

나.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對韓) 수교결정은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적 고려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이전처럼 체제유지 지원대상,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자국에게 부담을 주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경제난과 대외고립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북한을 혈맹 또는 우호협력 대상으로 보다는 부담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체제유지 지원 대상

한반도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북삼성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바,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국면이 조성될 경우, 중국은 즉각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반도간의 관계를 「순치관계」(唇齒關係)로 간주하여 왔다. 1950년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이유중의 하나는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가 가지는 안보전략적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²⁾ 중국은 적어도 한반도의 북측지

11) 이러한 관점은 Robert G. Sutter, "Korea: Improve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 Motives and Implications," 「연합통신」, 1996. 3. 2, pp. 英 12~15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2) 중국은 미국이 38선을 넘어 중국의 국경지역까지 진격하여 중국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가보위를 위해 한국전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周恩來選集」, 上卷(北京: 人民出版社, 1984), p. 52.

역이 자신의 세력범위내에 있기를 바라왔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 초에도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안보전략적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한국과의 수교이후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을 우선시하였다. 중국은 소위 「정경분리정책」(政經分離政策)을 통해 한반도에서 최대한도의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국이 여전히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의 위험성과 이것이 중국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기인하였다.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된 후 1년여만에 소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점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등 사회주의체제가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될 경우, 이는 중국의 체제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소위 「소동파」(蘇東波)(소련과 동유럽 체제붕괴의 파고)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¹³⁾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적 고립심화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지게 함으로써 비이성적 행동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중국 자신의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에도 북한에

13) 1990년대 초기 중국에서 전개된 「소동파」(蘇東波) 논쟁에 대해서는 張雅君, “蘇聯變局對中共的衝擊: 危機效應的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4卷 第11期 (1991. 11), pp. 6~20; 段若非, “堅持人民民主專政, 反對和防止和平演變,” 「人民日報」, 1991. 6. 5 참조.

서 사회주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지속한다는 자세를 취하였다.¹⁴⁾

1990년대초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화평연변」(和平演變)정책도¹⁵⁾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정책을 지속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미국이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을 구실로 잔존 사회주의국가에 대해 각종 압력을 강화하자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자국의 사회주의체제 안정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에도 중국이 자국의 변경지역에 위치한 북한을 사회주의 형제국 또는 전통 우호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하였던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2) 전략적 협력대상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북한은 중국의 수도인 北京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

- 14) 吳建民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국교정상화 조인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해서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폐기 또는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文匯報」, 1992. 8. 24.
- 15) 중국은 「화평연변」(和平演變)정책을 공산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이 한층 발전된 형태라고 간주한다. 중국은 「화평연변」(和平演變)정책을 군사력 이외에 경제수단이나 외교와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梁云彤 等, 「美國和平演變戰略」, (瀋陽: 吉林人民出版社, 1992) 참조.
- 16) 한·중수교 이후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의 대외정책 방침이 천명된 「政府工作報告」에서 李鵬 총리는 중국이 북한과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李鵬在人大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3. 4. 1.

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에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이기를 바라왔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북한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정부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치·경제적 양보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에도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는 한국보다도 북한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미국의 대중 압력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냉전체제 붕괴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이 중국의 대한 조기 수교 결정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초 당시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었는 바, 특히 중국의 유일한 동맹조약(「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 체결국인 북한은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중국은 북한과 사회주의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공동 대응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 협상도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은 1991년부터 1년여 동안 수교교섭 협상을 전개하여 관계개선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 바,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일·북관계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대북한 진출이 궁극적으로는 대중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¹⁷⁾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이 한·중수교에 대해 북한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던 사실도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기인하였다. 내부적으로 한국과의 수교방향이 확정된 직후인 1992년 4월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한·중수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楊尙昆 주석은 중·북한 관계가 여전히 「순치관계」(脣齒關係)이며 「피로 맺은 혁명전우의 관계」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대한(對韓) 수교가 중·북한관계에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 국제고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마정책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로 남아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3) 경제·정치적 부담요인

경제건설을 최우선적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17) 중국은 19세기말부터 한반도가 일본의 대중침략의 징검다리로 활용되어 왔다고 인식하여 왔다. 解力夫, 「朝鮮戰爭實錄」, 上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 p. 159; 陸俊元, “朝鮮半島的地緣戰略結構及其演化,” 「現代國際關係」, 1996年 第9期 (1996. 9), p. 33.

18) “中朝友誼, 歷久彌堅,” 「人民日報」, 1992. 4. 18; 韋木, “中韓建交與東北亞局勢,” 「廣角鏡」, 1992年 9月號 (1992. 9), p. 28.

1992년 2월 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개최된 12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건설을 당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요소 도입정책을 더욱 적극화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은 결코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중국에게 이익이 되기 보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이 강조하는 대북 우호관계는 실질보다는 명분과 형식에 치중된 개념이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논의가 전개되었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는 바,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동아시아질서 불안정은 중국에게 결코 이롭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북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잔류와 핵무기 개발 중단 결정을 유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도록 하였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단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심각한 경제난과 대외고립 상태에 처한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과 대외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북한을 한반도의 두 개의 외교상대국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¹⁹⁾

다. 북한의 대중 인식

(1) 체제유지를 위한 협력대상

1990년대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미국의 걸프전 압승,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력 및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 등으로 외교적 고립과 안보위협 그리고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자신이 제국주의의 공세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²⁰⁾ 북한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북한은 대내 식량난과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1991년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시 경화결제 무역방식을 채택하면서 원유수출을 중단하고, 1993년 이후에는 이란이 대북 원유 수출을 중지함으로써 북한에게 필요한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이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연간 수십만톤의 곡물을 제공해 왔는 바,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북한경제의 파탄을 지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국가의 군사적·사상적 위협에

- 19)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학자인 易小熊(Xiaoxiong Yi)도 중국어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China's North Korea Policy: A Waiting Game,"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1997. 9. 24), p. III.
- 20)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을 「피포위 의식의 정세관」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논문으로서는 한호석, "최근 북의 정세관과 정세대응에 대한 답론 분석," WWW.POND.COM, pp. 2~4가 있다. 한호석은 뉴욕에 있는 미주평화통일연구소 소장으로서 친북 성향을 지닌 인사이다.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공고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자신의 안보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²¹⁾ 중국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는 북한의 안보에 필수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중·북간간 혈맹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²²⁾

(2) 수정사회주의국가

상기한 바와 같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북한은 중국을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는 바, 이는 북한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중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혈맹국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의 대한국 관계정상화 정책을 ‘현대 수정주의자의 반사회주의 책동’이라고 간접 비난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시에는 중국을 ‘제국주의자에 굴복한 배신자·변절자’라고 공격하였다.²³⁾

21) 북한은 핵문제에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압력이 제기되기 시작한 1993년 7월 중·북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2주년 기념식에서 중·북간관계가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3. 7. 10.

22) 한·중수교 직후인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14차 당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명의로 중국에 축전을 보낸 바 있는데, 여기서 북한은 “반제국통 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이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로동신문」, 1992. 10. 12.

23) 「중앙방송」(평양), 1992. 9. 27, “중국을 「배신자·변절자」로 간접 비난,” 「내

물론 1990년 9월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발표한 직후 북한이 보인 반응과 비교하면,²⁴⁾ 이는 다소 온건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2년 10월 중국은 14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건설을 핵심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였다.²⁵⁾ 중국에서 공허한 사회주의의 구호는 더 이상 주창되지 않게 되었고, 부의 축적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역설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해왔다. 북한 김정일은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정책을 “자본주의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면서 자본주의 복귀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중국을 간접 비난하였다.²⁶⁾ 이는 북한이 중국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야별 중·북한관계

상기 한·중수교에 따른 중국과 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변화 이

외통신], 보도판, 1992. 9. 29에서 재인용.

- 24) 북한은 소련의 대한민국 수교에 대해 ‘달리로 팔고 사는 외교’라고 공격하고, 소련을 한반도 분열의 책임자로서까지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로동신문」, 1990. 10. 5.
- 25) 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 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四大以來重要文獻選編」(北京: 人民出版社, 1995), pp. 16~34.
- 2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후 중·북관계가 분야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검토해 보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상 정치·군사·경제관계로 구분하여 중·북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정치관계

중국의 대북 체제유지 지원과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중국과 북한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북한간에는 당·정·군 고위지도부간 교류가 이전과 큰 차이없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중수교 직후인 9월 江澤民과 李鵬 등 중국의 당·정 지도부는 북한 창건기념일을 기해 김일성에게 축전을 보내고, 김일성도 중국의 창건기념일을 맞이하여 江澤民에게 축전을 발송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²⁷⁾ 양국 지도부간에 교환된 축전에서 사용된 용어는 한·중수교 이전에 사용된 용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국은 “반제 공동투쟁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 친선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북관계가 혈맹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⁸⁾

1993년 7월에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4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공산당내 차세대 선두주자인 胡錦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遲浩田 국방부장과 洪學智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²⁹⁾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과 같은 연배인 胡錦濤를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중·북간 우호협력관계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고자 하였다.

27) 「人民日報」, 1992. 10. 1.

28) 「로동신문」, 1992. 10. 12.

29) 「人民日報」, 1993. 7. 26.

특히 遲浩田 국방부장과 군 원로인 洪學智가 대표단에 포함된 것도 한국전 이후의 중·북한간 혈맹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해 9월 王漢斌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예방하였는데, 김일성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성공을 찬양하고 중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⁰⁾

1994년 1월에는 황장엽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丁關根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등과 회담을 가졌다. 江澤民 주석은 양국간 친선관계가 피로써 맺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친선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지도자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에도 중·북한간 전통 우호협력관계에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주한 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철수 주장에 공감함을 표시하였는데, 이 점도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구소련과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을 당시 중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구소련의 팽창야욕을 견제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한국주둔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이후 중국은 한국 주둔 미군이 중국과 북한전제를

30) 「北京廣播電臺」, 1993. 9. 17.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³¹⁾ 중국은 주한 미군이 대만문제 해결 등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북한과의 우호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³²⁾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중·북한간 고위급 지도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접촉레벨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과거 중국과 북한은 매년 최고지도자의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우호협력을 다져왔으나, 한·중수교 이후 양국간에는 江澤民, 李鵬, 김일성 등 최고지도자의 방문외교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2년 한·중수교 직후와 1994년 10월 李鵬의 한국방문 이전 중국은 江澤民 주석의 북한방문을 타진하였으나, 북한은 대내문제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³⁾ 북한이 중국의 최고지도자 방문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중수교 이후 중·북한간에 이루어진 인적 교류가 1994년 9월 이종욱 부주석의 방중을 제외하고 부장급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점도 중·북한관계가 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1989년부터

31) 申相振, 全東震,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02; David Shamba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on a Collisi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8, 1994; Ye Ruan, "Historic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Concerns," Andrew Mack (ed.), *Asian Flashpoint: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St. Leonards: Allen & Unwin, 1993), pp. 37~44.

32) 중국은 자신이 외국에 단 한명의 군대도 주둔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미국의 패권정책과 강권정책 추진에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邢世忠, "中國威脅論可以休矣," 「求是」, 1996年 第3期 (1996. 2), p. 17.

33) 金子秀敏, "中國から見た北朝鮮," 「諸君」, 第27卷 第3號 (1995. 3), pp. 104~106.

1991년까지 趙紫陽, 江澤民, 김일성, 연형묵 등 중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상대국을 상호 교환방문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북한 지도자간 인적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⁴⁾

한·중수교 이후 중·북한관계의 변화 움직임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노정되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북한핵문제가 동북아정세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4.8)하여 북한에게 NPT 의무이행을 권고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고 핵무기개발을 지속할 경우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조성된 위기를 압력이나 제재수단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간접적으로 반대하였다.³⁵⁾ 중국은 미국 주도로 유엔안보리에 상정된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자구 수정만을 요구하였을 따름이었다.³⁶⁾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 형제국인 북한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데 따른 외교적 부담을 떠맡으려 하기 보다 주변정세의 안

34) 趙紫陽은 1987년 당총서기에 취임한후 최초의 해외 순방국으로 북한을 선택하였으며, 江澤民도 1989년 당총서기에 오른 후인 1990년 3월 중국의 최고지도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김일성 역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연속 3년동안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부와 접촉하였다.

35)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가 인내로운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 탈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文匯報」, 1993. 3. 24. 江澤民主석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NPT 탈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文匯報」, 1993. 5. 23.

36) 중국은 유엔안보리에 상정된 대북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하였다. 「文匯報」, 1993. 5. 13.

정유지 정책을 더 중시하였던 것이다.

<표 1> 중·북한간 주요 지도자 교류현황 (1992.9~1994)

중국 지도자 방북	북한 지도자 방중
賀鵬飛 중장(1992. 10) 魏金山 중장(1992. 10)	김일철 대장(1992. 9)
錢其琛 외교부장(1993. 5)	전재선 대장(1992. 11) 강정모 대외경제위 부위원장(1992. 12)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1993. 5) 김영남 외교부장(1993. 5)
胡錦濤 정치국상무위원(1993. 7) 遲浩田 국방부장(1993. 7) 王漢斌 전인대 부위원장(1993. 9) 劉忠德 문화부장(1993. 9) 李文卿 중장(1993. 11) 洪學智 상장(1993. 12)	육봉린 상장(1993. 11)
李淑鍾 대외연락부장(1994. 2)	황장엽 당비서(1994. 1) 김학산 상장(1994. 2) 김정각 상장(1994. 4)
王克 심양군구사령관(1994. 6) 丁關根 정치국원(1994. 7)	최광 총참모장 (1994. 6)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1994. 7) 송호경 외교부 부부장(1994. 9)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1994. 9) 이종옥 부주석(1994. 9) 오용방 대장(1994. 10) 현준극 당국제부장(1994. 12)

출처: 「내외통신」, 「주간북한동향」 해당판.

또한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서방측과 북한측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립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서방측의 제재행사를 반대함

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 천명을 통해 서방측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보장받으려 하였다.³⁷⁾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압력과 제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북한이 바라는 것처럼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주변질서 안정 저해요인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일본과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등 동아시아 질서에 극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³⁸⁾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이제 혈맹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구현하기 위한 협력대상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상이 잘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의 휴전체제 무력화 기도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휴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남북한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평화체제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체제가 파기되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개입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37)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서방측의 노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연장받는 등 북한핵문제를 대미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중국 군사문제에 대해 권위적인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국방연구원의 김태호 박사도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태호, “북한의 대중·러 안보관계 현황과 전망,”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서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5), p. 25.

38) Banning Garrett,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the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 536; 蜀聲, “中共關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p. 77.

고 판단하여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 하는데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다.³⁹⁾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 주장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가 중국과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한과 미국에 의해서 논의 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증대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휴전체제 전환문제가 중국과 한국이 배제된 채 해결되어서는 안되며 또 해결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⁴⁰⁾

나. 군사관계

중·북한간 군사관계는 이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긴밀하게 유지되었다. 1992년 9월 이후부터 1994년까지 중국과 북한 군사 대표단의 상호 방문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북한 군지도자간 접촉과 교류는 한·중수교 이전보다 오히려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이 기간동안 북한해군 친선참관단(김일철 해군대장), 중국군 총참모부 대표단(賀鵬飛 장비부장), 6.25 참전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魏金山 중장), 북한군 친선참관단(전재선 부총참모장), 중국 인민지원군 영웅대표단(劉智伝 공군사령관), 중국군 친선참관단(李文卿 중장), 북한군

39)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文匯報」(香港), 1994. 9. 2; 申相振, “中國,” 姜元植 등,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54~57 참조.

40) 李鵬 총리는 한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한과 관계 각축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1994. 11. 5. 「文匯報」, 1994. 11. 5.

친선참관단(김정각·상장), 북한 군사대표단(최광 총참모장), 중국군 대표단(王克 瀋陽軍區 사령관), 북한군 대표단(오용방 대장) 등이 차례로 상대국을 방문(방문시기는 상기 표 1 참조)하였다.

중국과 북한 군지도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한·중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적 고려 이외에, 양국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에 크게 기인하였다. 중국과 북한군의 원로들은 1930년대초 이래 항일전쟁과 1950년대초 한국전에서 함께 피를 흘린 경험으로 인하여 심정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1931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 東北抗日聯軍 지휘아래 항일 유격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⁴¹⁾ 鄧小平, 彭眞, 楊尙昆, 洪學智 등 중국 공산당 원로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張震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遲浩田 국방부장, 傅全有 총후군부장, 于永波 총정치부 주임, 王克 瀋陽軍區 사령관, 趙南起 군사과학원장, 徐惠滋 부총참모장, 史玉孝 廣州軍區 정치위원 등 중국군 최고 지도자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었다는 사실도 중·북한 군사지도자간 접촉·교류를 빈번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제도보다도 인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요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국 군지도부간 유대관계는 중·북간 군사적 우호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초 중국과 북한 군지도부간 활발한 접촉을 통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무기(부품), 전략물자, 군사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무기·장비들이 중국의 무기체계와 유사한 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무기부품 공급

41) 楊昭全, 韓俊光, 「中朝關係簡史」(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pp. 384~408; 「人民日報」, 1950. 7. 19.

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92년 10월 賀鵬飛 중국군 총참모부 장비부장을 대표로 하는 군사대표단의 북한 방문시 중국의 대북한 군사 무기부품 공급문제가 주요 협의내용으로 상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²⁾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부품이나 전투기, 비행용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중국과 북한 지도부는 양국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군사동맹조약)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한·중수교 직후 吳建民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북간에 서명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錢其琛 외교부장도 한·중수교로 인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외에 공표하였다.⁴³⁾ 한·중수교 이후 중국 지도부가 ‘새 친구를 사귀면서 옛친구를 잊지 않는다(結識新朋友, 不忘老朋友)’고 누차 언급한 것도 중·북한간 협력지속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⁴⁾ 또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13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3차 당대회) 축전을 통해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는 바,⁴⁵⁾ 중·북한간 군사동맹조약이 큰 변화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특히 1994년 6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제재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중국지도부는 당시 北京을 방문하였던 최광 북한군 총참모장에게 핵포기 대가로 북한의 안보를

42)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예하부대인 장비부는 대외 무기판매·수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 판공실내의 무기이전 전담부서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태호, “북한의 대중·러 안보관계 현황과 전망,” p. 29.

43) 「文匯報」, 1992. 8. 25.

44) 「文匯報」, 1992. 8. 25.

45)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1992. 10. 11~17), p. 5.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⁶⁾

아울러 중국은 1950년 한국전 참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국은 한국전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한국전 참전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다. 중국은 한국군과 미군이 38선을 월경하여 중국 국경지역까지 진격, 자신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미침으로써 「항미보국」(抗美援朝, 保家衛國)적 차원에서 인민지원군을 한국전에 파병하였다는 논리를 계속 강조하였다.⁴⁷⁾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중·북한관계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긴밀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경제관계

아래 <표 2>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중수교 이전보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다. 중국과의 교역이 북한의 총교역량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줄곧 30%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무역을 포함할 경우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훨씬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확대된 주요 이유로서는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에 따른 결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의 침체로 중국과 북한간 교역이 주로 중국의 대북한 물자 제공의 형태로 추진되었는 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전략물자 제공도 북

46) 朱建榮, “북한-중국관계의 특수성,” 「극동문제」, 1997년 4월호, p. 46.

47) 熊志勇, 「中國與美國」(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5), pp. 190~200; 「朝鮮日報」, 1992. 10. 7.

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

(단위: %)

연도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중국	10.9	24.8	27.4	36.3	29.6	26.8	28.6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鑑」, 각년판,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1997」(北京: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1997)

중국과 북한간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에너지·식량 제공이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게 100만톤 가량의 원유와 150만톤 정도의 코크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에너지 공급 규모는 북한이 외국에서 도입하는 에너지의 90%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였다. 또한 중국은 1990년대 들어 북한에 대해 줄곧 연간 100만톤 가량의 식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중수교 이후인 1993년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제공을 확대하였으나, 1994년에는 중국의 대북한 식량수출이 감소하였다. 1994년 중국의 대북한 식량제공 감소는 10월에 발표된 쌀과 옥수수 등 곡물 수출 금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⁴⁸⁾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공급된 물품 통계를 보면 양국간 교역에서 원유와

48) 若林 敬子, “中國人口の12億突破は食糧問題に威脅か,” 「世界週報」, 1995. 3. 21, pp. 10~15.

코크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3>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품 비중

(단위: 천달러, %)

수입상품 \ 연도	1992	1993	1994
광물성연료·광물류	222,323(41.1)	237,861(39.5)	169,738(44.1)
곡물·제분공업제품	81,329(15.1)	103,569(17.7)	25,443(6.7)
합 계	(53.8)	(57.2)	(50.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鑑 1993」(北京: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1994);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海關統計」(北京: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1994).

* 1994년도 통계는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수치임.

중국과 북한간 무역거래 방식을 통해서도 양국간 경제관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중소관계가 긴장국면에 처했을 당시 중국은 대북한 교역시 우호가격제를 실시하고 청산결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범위내에 묶어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2년 초 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개혁·개방 속도를 가속화 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는 대북한 경제정책을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중국은 1992년부터 북한과의 무역거래 방식을 청산결제 방식에서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북 수출품 가격을 국제시장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⁴⁹⁾ 「사회주의 시장경제

49) 중국은 1992년 1월 26일 북한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1993년 1월부터 북한에게 경화결제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 방식 적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人民日報」(海外版), 1992. 1. 29; Nicholas D. Kristof,

체제」(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도입을 모색하였던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형태를 시장경제 논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경제사정에 대한 고려와 한·중수교에 대한 무마차원에서 전면적인 경화결제 방식 시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경제의 파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고려하여 경화결제 시행 유보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⁵⁰⁾ 1992년 14차 당대회 이후 대외교역에서 시장경제 논리 적용을 더욱 강조하였던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시 청산결제 방식을 계속 적용하였던 것은 북한체제 유지 지원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소수교와 러시아의 대북한 경제 지원 중단이 북·러관계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전례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전략적 지원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결국 중국과 북한간 총교역의 50% 정도가 물물교환 또한 청산결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20%는 민간부문의 국경왕래를 통한 물물교환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경화결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간 교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과 원유 등 전략물자 교류는 대부분 청산결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제시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잦으며, 일정 기간동안 결제

“China Asks for Cash in Trade with N.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31, 1992.

50) 1993년 1월 강정모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北京을 방문하여 중국 측에 차관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에서 경화결제 방식 적용을 당분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日本經濟新聞』, 1993. 1. 4.

가 안되는 경우 지원명목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¹⁾

3. 소결: 정치관계의 소원화와 군사경제협력관계의 지속

본 장에서는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 그리고 분야별 중·북한관계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한·중수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유리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고 탈냉전기 동아시아 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중수교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북한을 이전처럼 사회주의체제 유지 지원대상,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간주한 동시에 경제적·정치적 부담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한·중수교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계속 최소한도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군사교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胡錦濤 정치국상무위원 등 비중있는 지도자들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며, 북한군 지도부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과 에너지 제공정책을 지속하고 청산결제에 의한 무역거래 방식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 자신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국과 수교를 단행한데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는 중·북한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중국의 江澤民과 李鵬 등 최고 지도부와 북한의 김일성과 김

51) 북한은 대(對)중국 구상물자 수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연간 2~3억달러 정도를 청산하지 못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승렬,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분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47~48.

정일간에 상호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중수교 이전까지 양국 최고지도부간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중·북한관계가 정치적으로 소원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에 나타났던 입장차이를 통해서도 중·북한간 정치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정치분야와는 달리 군사·경제분야에서는 중·북한관계에 큰 변화가 야기되지 않았다. 중·북한간 고위 군사지도자간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군사동맹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의 대북 체제유지 지원정책으로 중·북한간 경제관계도 긴밀하게 유지되었다.

Ⅲ. 미·북 기본합의 이후 중·북관계

1. 미·북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가. 미·북 관계개선 합의

냉전시기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대립을 지속함으로써 공식적인 접촉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저지하였으며, 북한은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타도 대상이었고,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 역시 적성국으로 간주되었다. 1988년 12월 미·북한은 北京에서 참사관급 접촉을 개시한 이래 점차 접촉의 수준을 높여 왔지만, 1993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미·북한간에는 주한미군 철수, 탐스 퍼리트훈련 중지,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 북한의 테러리즘 중단 및 인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계개선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후 미국은 북한의 NPT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강은 양면정책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유엔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대북 군사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뉴욕과 제네바에서 3단계에 걸쳐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⁵²⁾ 미국과 북한은 차관보급 접촉을 전개하여 핵문제 해결과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52) 미국과 북한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였다. 1차 고위급회담은 1993년 6월 北京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고위급회담은 1993년 7월에 개최되었다. 제3차 고위급회담은 1994년 8월부터 10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방문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핵개발 동결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한의 핵문제 동결과 양국간 관계개선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북한은 NPT체제 일원으로 잔류하고 핵안전협정의 이행을 수락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경수로 건설시까지 대체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합의문 서명 3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및 통신을 포함한 투자와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하고, 전문가회담을 개최하여 상대방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궁극적으로 양국관계를 대사급까지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핵무기 개발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추진해 왔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대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미·북간 협상이 타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중수교로 인하여 조성된 국제고립을 타개하고 경제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다.⁵³⁾ 북한의 핵무기 개발 카드가 처음에는 안보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점차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냉전체제 붕괴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경제적으로 광활한 시장을 확보하는데 정책목표를 두어왔다. 특히 미국은 대내 경제문제로 동북아 지역문제에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지역

53) 북한은 한·중수교 다음날 노동당 기관지에 대미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설을 발표한 바 있다. 리석운,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관건적고리,” 『로동신문』, 1992. 8. 25.

국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였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불안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다.⁵⁴⁾

북한의 핵무기개발 기도는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정책 추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방지정책에 직접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북아지역 안정에 중대한 도전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국들에게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갖게 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고 미국과 이들 동맹국과의 관계에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대북 핵협상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제네바 기본 합의이후 미국과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을 전개하는 한편, 미사일협상, 미군유해 송환협상, 경수로 건설 및 에너지 지원 협상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미국은 대북 연착륙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1단계 교역·투자제한 완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양국간 이견, 미국 외교행낭과 외교관의 판문점 통과문제, 대사관부지 선정문제 등으로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54) 이와 같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구상은 1993년 7월 클린턴 미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시 발표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하면서도 역내 동맹국과의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지역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을 축소하면서도 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는 계속 유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U.S. President Bill Clinton'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July 10, 1993.*

나. 중국의 인식과 정책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정책 목표로 추진해 온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동아시아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의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일본에게 군사대국화의 빌미를 주게 되고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여지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대두되었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역설해 왔다.⁵⁵⁾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기본 자세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타결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 핵문제 타결과 병행하여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온 이유가 북한의 대외 고립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여 왔다.⁵⁶⁾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도도 대미 경제지원 획득과 대미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55) 「人民日報」, 1993. 6. 13; 華昕, “朝鮮核問題的前前後後,” 「世界知識」, 1994年 第10期 (1994. 5. 16), pp. 14~15; Wang Dajun, Jiang Ye, “The Nuclear Issue of the DPRK,” *Beijing Review*, July 4~10, 1994, pp. 16~17.

56) Banning Garrett,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the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35~537.

개선함으로써 더 이상 대외고립을 느끼지 않게 될 경우, 북한의 대외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난을 해소하고 대외고립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중국은 1992년 북한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는 바, 한·중수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미·북관계 개선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중국은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한·중수교로 인한 북한과의 감정적 앙금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1992년말 부시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한 후 미국의 대중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감축·중단을 약속한 「8.17공동성명」을 무시하면서까지 대만에 대해 160억달러 상당의 첨단 전투기 판매를 약속한 것은 다분히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⁵⁷⁾

1993년 이후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위협론」(中國威脅論)을 제기하여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역설하였고, 2000년 하계올림픽이 北京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전세계 중국인들의 「대중화」(大中華)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권력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였던 중국지도부의 열망에 찬물을 드리웠다.⁵⁸⁾ 더욱이

57) 王中人, “細勘中國威脅論,” 「世界知識」, 1997年 第12期 (1997. 6. 16), p. 6.

58) Nayan Chanda, Lincoln Kaye, “Circling Hawk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미국은 1994년 9월 대만과의 관계격상정책을 채택하여 대만관리의 미국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미국주재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북미사무협조위원회」(北美事務協調委員會)에서 「주미 대북경제문화대표처」(駐美 臺北經濟文化代表處)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을 제고시켜 주었다. 1995년 6월에는 비록 사적 형식을 띤 것이기는 했지만, 1979년 국교단절 이후 최초로 李登輝 대만 총통의 미국방문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국은 1996년 3월 대만총통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위협을 가하자 대만해협 인근에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여 대만을 보호하였다.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정책은 중국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인식됨으로써 중·미관계를 긴장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⁵⁹⁾

아울러 미국은 1994년 이래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 교섭을 적극 추진하여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1995년 7월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군사 강대국으로서 1975년 통일이후 중국과 두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르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던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진출정책도 중국에게 있어서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⁶⁰⁾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중국군제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위협론」(中國威脅論)과 「문명충돌론」(文明衝突論)을 고취시키는 이유가 중국과 지역국

October 7, 1993, pp. 12~13; 羅冰, “中共軍方插手對美政策,” 「爭鳴」, 1994년 5월號 (1994. 5), pp. 10~12.

59) 이에 대해서는 신상진,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동아시아에서 패권확보를 위한 대립,”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pp. 263~287 참조.

60) 未羊, “中美關係的挫折和前景,” 「瞭望」, 1995년 第27期 (1995. 7. 3), p. 45; 令狐衍, “美越建交--中美越新三角,” 「鏡報月刊」, 1995년 8월號 (1995. 8), pp. 76~78.

간의 관계를 이간시킴으로써 중국이 경제건설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였다.⁶¹⁾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21세기 초까지 경제건설을 통해 「총합국력」을 증강하여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에게 있어서 미·북관계 개선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가 미·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4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하자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적극 촉구하지 않았던 데에서도 미·북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유보적인 입장이 잘 표출되었다.⁶²⁾

이와 같이 중국은 미·북관계 개선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는 바, 한편으로는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미·북관계 개선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61) 미국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문명충돌론」에 대한 중국의 견해에 대해서는 謝益顯, “對文明之衝突論的剖析,” 「國際問題研究」, 1994年 第2期 (1994. 4), pp. 39~44; Wang Jisi, “Civilizations: Clash or Fusion?” *Beijing Review*, January 15~21, 1996 참조.

62)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Zhao Gancheng, “China’s Korea Unification Policy,”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by Kyungnam University and American University, Seoul Hilton Hotel, May 2 2~23, 1996, pp. 27~28.

2. 분야별 중·북한관계

상기한 바와 같이, 미·북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전략이 결합되어 성사되었다. 따라서 미·북 합의이후 중·북관계에 일정 정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정치·군사·경제 부문별 중·북관계 전개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정치관계

1994년 미·북 제네바 핵합의 이후의 중·북한관계는 상당부분 상호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북한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막는데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지만, 북한은 중국의 대미 및 대한민국 정책 전개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협력대상으로도 인식되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판단은 1994년 10월 미·북한간 제네바 핵합의이후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정책이 적극화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정책이 노골화된 후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에 동참하는 세력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과 한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전략적 고려에 입각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미국과 한국의 자세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었다.

대미관계 개선이 북한 대외정책 기조의 하나로 설정되게 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북한의 기존 인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

은 여전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식량의 절대량을 공급해 주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지지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경제봉쇄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중수교 이후 내부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어 온 북한의 김정일에게 있어서 중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상대국이 아니었다.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 정책을 통해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와 지원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통치이념과 발전정책의 차이도 양국간 정치관계에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1980년대부터 교조주의적인 통치이념을 버리고 실사구시적인 방향으로 통치이념을 수정해 왔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毛澤東思想은 더 이상 중국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력 증대가 정책의 중점이 되고 있다.⁶³⁾ 나아가 14차 당대회와 15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중국은 시장경제와 사유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체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자본주의 도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북 제네바 합의 직후인 1994년 11월 북한은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만능주의적 정책을 반사회주의 노선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중·북관계가 더 이상 이념적 공통성에 기반한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⁶⁴⁾ 북한은 외부 사상과 문화 도입에 따

63) 중국의 통치이념 변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신상진, “사회주의 정치체제 변화: 중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산권연구」 제3집 (1993. 1), pp. 2~4 참조.

6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르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이 자신에게 중국식 개혁·개방 방식을 수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반대해 왔다.⁶⁵⁾ 이와 같은 국가발전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입장 차이도 중·북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1997년 2월 鄧小平의 사망으로 중국과 북한의 혁명 1세대 지도부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양국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⁶⁶⁾ 중국정치는 江澤民, 李鵬, 朱鎔基, 胡錦濤 등 혁명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테크노크라트형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북한에서도 김일성, 오진우, 최광 등이 사망하고 중국의 지도자들과 친분관계가 깊지 않은 김정일, 이을설, 조명록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북한간 관계개선 합의 이후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은 미·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전까지 정치·안보적으로는 북한을 계속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지만, 미·북 기본합의 이후에는 한국과 정치·안보관계를 모색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정책을 채

65)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원조 제공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기 바라고 있으나,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적극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북한의 개혁·개방문제를 놓고 중국과 북한간에 마찰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66) 과거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항일 유격전과 한국전쟁 이래 유지되어 온 인적 유대관계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1997년 2월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 사이에 유지되어 왔던 신뢰관계를 지속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택함으로써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추진하는데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李鵬 총리가 미·북 기본합의 직후인 1994년 10월 31일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1995년에는 喬石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江澤民 주석이 차례로 서울을 방문하였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 북한간에 최고위급 지도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안보관계를 모색함으로써 미국과 북한간 관계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미·북 관계개선 합의 이후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북한 중시정책에서 점차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전략적 이익에 입각하여 북한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범위내에 묶어 두고자 하였으며, 한국과의 정치·안보관계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미·북관계 개선 등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 가능성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미·북 기본합의 이후 중국과 북한간 정치관계 변화는 북한의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측 대표 철수 요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서 위기상황

67) 李鵬총리 방한이 미·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문홍호, 「李鵬총리의 방한결과 분석과 대중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3~14 참조.

을 조성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협상에 임하도록 하려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세는 정전체제 파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려는 북한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반도 정전체제 무력화 일환으로 북한은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측 대표 철수를 요구하였고, 중국은 1994년 12월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표단을 ‘소환’하였다.⁶⁸⁾ 물론 북한의 정전위 중국대표단 철수요구는 정전체제 무력화에 일차적 목적이 있었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96년 4월 한·미 공동으로 제의된 남북한과 미, 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방안에 대해서도 북한은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북한은 미국하고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변화시키지 않고 한국과 중국의 회담 참여를 반대하였다.⁶⁹⁾ 1997년 3월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국간 4자회담 설명회가 개최되었을 때 중국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도 북한이 미국만을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의 당사자로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북한은 1997년 4월 「3+1」회담 개최를 주장하였는 바,⁷⁰⁾ 여기에서도 중국측의 4자회담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68) 중국은 북한이 전기와 수도 등 중국 대표단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표단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최근 퇴임한 陶炳蔚 선생의 민족통일연구원 원내세미나 발표, 1995. 1. 17.

69) 1996년 3월 중국의 대(對)대만 무력시위로 중·미간 군사대결 위험이 고조되었을 때 劉華秋 중국 국무원 외사판공실 주임은 미국을 방문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한 미·북한간 교착상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대미 관계개선 카드로 활용하였다. 미주평화통일연구소, “미국 의 4자회담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WWW.POND.COM, 1996. 5. 10, p. 4.

70) 「동아일보」, 1997. 4. 25.

중국과 북한은 4자회담문제와 관련 사전 의견조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71) 중국의 4자회담 참여문제와 관련한 중·북한 간 입장차이는 양국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중·북한 고위지도자 교환방문(1995~1997.8)

중국지도자 방북	북한지도자 방중
孫啓祥 국방부 외사국 부국장(1995. 3)	장철 부총리(1995. 1) 김복신 부총리(1995. 1) 최희정 국가과학기술위원장(1995. 2)
徐靑 기술평사위 부위원장(1995. 6) 唐家璇 외교부 부부장(1995. 6) 柳卿欽 대외연락부 부부장(1995. 6) 張工 중장(1995. 9) 史玉孝 광주군구 정치위원(1995. 10) 戴秉國 대외연락부 부부장(1996. 2)	김정각 상장(1995. 4) 지재룡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1995. 6) 김학섭 체신부장(1995. 6)
石廣生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1996. 5)	현철해 후방총국 국장(1995. 9) 최우진 외교부 부부장(1995. 10)
王繼英 북해함대 사령관(1996. 7) 羅幹 국무원 비서장(1996. 7)	이상우 인민무력부 외사국장(1996. 3) 정창렬 상장(1996. 5) 홍성남 부총리(1996. 5) 최우진 외교부 부부장(1996. 6)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1996. 6) 김윤혁 부총리(1996. 7)
龍永圖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1996. 9) 姜福鋼 중장(1996. 10)	김양건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1996. 8) 황진택 상장(1996. 9) 이명운 국경경비총국 부국장(1996. 10) 김영남 외교부장(1997. 3)
李北海 대외연락부 부부장(1997. 4) 劉山齋 대외무역경제부 부부장(1997. 6) 秦樺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1997. 7)	이봉죽 인민군 부총참모장(1997. 6)

자료: 「내외통신」, 「주간 북한동향」 해당판.

71) 1997년 8월 5일 뉴욕 4자회담 예비회담에 중국대표가 참가하기 이전 중국과 북한은 사전 의견 조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7. 7. 29.

<표 4>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과 북한간 정치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는 양국 최고 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에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사절을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고립과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아직도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을 더 이상 진정한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⁷²⁾ 아울러 1997년 2월 중국의 실권자 鄧小平 사망 이후 북한은 애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는 바, 이도 역시 김정일이 중국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혈맹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⁷³⁾

한편, 1995년 이후 대만문제도 중·북한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95년 봄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 기간 중 대만 국적기의 대만-평양간 운항을 허가하고, 대만 高雄의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북한의 대만 전세기 평양운항 허가와 대만의 아시안게임 유치 지원을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간주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양국간에 외교적 마찰이 야기되었다.⁷⁴⁾ 또한 1997년에 들어서는 북한이 대만과 핵폐기물 반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문제

72)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199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당 50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자 하는 의향을 북한에 전달하였으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江澤民은 1995년 11월 한국방문 이전에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고자 하였다. 中國硏究會 編, 「中國年鑑, 1996」(東京: 新評論社, 1996), p. 112.

73) 반면 중국은 1994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김일성 사망 애도기간을 설정하였다.

74) 「中央日報」, 1995. 5. 7.

가 국제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중국은 공개적으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수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은 북한과 대만간 핵폐기물 거래가 정치성을 띤 것이며, 이를 계기로 북한과 대만이 관계개선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⁷⁵⁾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중요한 통치이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의 현지 도부에게 있어서 대만문제는 극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북한의 대만 접근정책은 중·북한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 군사관계

1994년말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군 고위 지도부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⁷⁶⁾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정각과 김광진 상장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고, 중국측에서도 張工, 史玉孝, 王繼英 등 군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1995년 10월 중국은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는 史玉孝 廣州軍區 정치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군지도자간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최광 총참모장은 史玉孝와의 회동시 양국관계가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6년 5월 북한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방중시에는 양국이 「군사원조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무기부품, 항공유, 군복용 목화 등 군수품 공급과 군사기술 지원문제에 합의하였다.⁷⁷⁾ 이로써 1996년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346만

75) 중국의 沈國放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이 북한과의 핵폐기물 거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중국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文匯報」, 1997. 1. 31.

76)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직후 북한의 오용방 대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995년에도 북한 김정각 상장과 중국 인민해방군 張工 중장, 史玉孝 중장이 각각 상호 교환 방문활동을 전개하였다.

달려 상당의 군수물자를 도입할 수 있었는데, 이는 1995년 대비 247% 증가된 규모이다.⁷⁸⁾

특히 1996년 7월에는 중·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의 北海艦隊 소속 함정이 북한의 남포항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중국의 王繼英 북해함대 사령관은 哈爾濱號와 西寧號 등 3,250톤에 달하는 旅大級 구축함 두척을 거느리고 남포 해군기지를 방문, 김일철 북한 해군사령관과 양국간 군사적 우호친선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미·북합의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간에 군사부면에서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과 북한군 최고 지도부간에 유지된 친밀한 교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권력구조상 중국군의 최고지도부는 9인으로 구성된 「당중앙군사위원회」인데, 이 중 5명이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군간부들이다.⁷⁹⁾ 이외에 張萬年 부주석은 팔로군 출신으로서 김광진, 김철만, 전문섭 등 북한의 빨치산 출신 군간부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국군 최고지도자들이 중국의 정치국확대회의에 참여하여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북 기본합의이후 중국과 북한간 군사관계가 더 이상 혈맹관계에 있지 않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측 대표단을 철수하도

77)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政策研究室, 「中國外交, 1997」(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7) 「1996년도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주요 조약 협정 일람표」 참조.

78)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鑑」(北京: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1997), 「동아일보」, 1997. 2. 6에서 재인용.

79)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江澤民 주석, 劉華清과 張震 부주석, 그리고 張萬年, 遲浩田, 傅全有, 于永波, 王克, 王瑞林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9명의 위원 중 張震, 遲浩全, 傅全有, 于永波, 王克은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록 요청하였고, 이에 중국은 1994년 12월 대표단을 소환하였다. 중국 대표단 철수는 비록 '소환' 형식을 띤 것이기는 했지만, 이는 1950년 10월 한국전 참전 이후 양국 군부간에 유지되어 온 혈맹적 유대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한과 접촉시에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이 도발하여 발생하는 한국전에는 다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⁸⁰⁾ 주변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중국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개입 조항의 구속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자세 속에는 북한의 무모한 대남 무력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중국의 한국전 참전문제에 대한 재평가도 중·북한간 군사관계의 현주소를 나타내 주는 척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전이 한국의 북침에 의해서 발발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한국전 개입이 중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⁸¹⁾ 이는 중국이 앞으로 북한을 돕기 위해 무리하게 한반도에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북한 군사관계가 질적 변화 과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0)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Summer 1997), p. 253; 「조선일보」, 1997. 4. 14.

81)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百年潮流」는 한국의 북침 입장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毛澤東의 한국전 참전 결정을 비난하는 문장을 게재한 바 있다. 「朝鮮日報」, 1997. 7. 5에서 재인용.

다. 경제관계

중국은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1995년 1,100만톤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식량을 제공해 주고 있다.⁸²⁾ 1995년 이후 북한이 수재와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어 체제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1995년 중국은 10만톤 이상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 제공하여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대략 250만톤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50만톤(무상원조분 12만톤 포함) 이상의 식량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 등 북한체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7년에도 중국은 북한에 두차례에 걸쳐서 15만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⁸³⁾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량중 상당량은 무상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물거래나 현금거래 또는 비공식 무역을

82) 북한에 대해 중국이 정확하게 얼마나 식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95년 중국은 북한에 대해 10만톤의 식량을 제공하였다고 공식 밝힌 바 있고, 1996년에는 12만톤을 제공했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식량지원 이외에 중국정부의 비공식 지원규모와 국경지역에서 밀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식량 공급량을 포함할 경우, 1996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총식량 규모는 약 7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1996년 중·북간 변경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억 1천 9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중·북간 전체 교역액중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9%에서 21.1%로 대폭 확대되었다. 「연합통신」, 1997. 3. 18.

83) 중국은 1997년 4월 12일 북한 주재 萬永祥 중국 대사를 통해 북한에 쌀 1만톤과 옥수수 6만톤 등 총 7만톤의 식량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고, 1997년 7월 14일에도 8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하였다. 「내외통신」, 보도판, 1997. 4. 15, 7. 16; *The Japan Times*, July 9, 1997.

통해 거래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연간 50만톤 이상의 중국 식량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⁴⁾

1992년 이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수출 중단정책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중국이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 되었다. 중동의 리비아가 북한의 무기와 물물교환 형식으로 제공하는 소량의 원유를 제외할 경우, 중국의 대북한 원유 제공은 북한의 생존에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은 매년 북한에 대해 약 100만톤 정도의 원유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공급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1994년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량이 다소 감소되다가, 미·북관계 개선 방침 발표 이후인 1995년부터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97년 6월 劉山齋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시 중국은 북한과 2천만원(인민폐) 상당의 원조물자 제공협정을 체결하였는데,⁸⁵⁾ 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물자가 원유와 유연탄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은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고자 하였다. 중국은 최소한도의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묶어 두는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⁶⁾

84) 일본과 국내 보도매체들은 1996년 5월 북한 홍성남 부총리 중국방문시 중국이 북한과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2000년까지 연간 50만톤 정도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의 고급연구원을 역임하였던 陶炳藹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중국측 인사들은 협정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1996년 6월 5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의 민족통일연구원 방문시 개최된 내부토론; 「중앙일보」, 1996. 6. 6; 「每日新聞」, 1996. 7. 18.

85) 「내외통신」, 보도판, 1997. 7. 16.

86) 중국은 북한이 적절한 경제개혁·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대북 지원이 실효

즉, 미·북 관계개선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은 김일성사후 북한체제 안정유지 지원과 북한과의 전략적 유대관계 유지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표 5> 북한의 국별 원유 도입량

(단위: 만톤)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1~4)
러시아	50	41	4	-	-	-	-	-
중국	114	110	110	110	105	83	102	26
이란	92	98	75	22	21	-	-	n.a.
리비아	4	-	-	20	10	8	8	n.a.
합계	260	252	189	152	136	91	110	n.a.

자료: 「中國海關統計年鑑」, 각년호, 조은호, 「최근 중국-북한 경제관계 변화 동향과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p. 24에서 재인용;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제287호 (1996. 6. 29~7. 5), p. 17.

3. 소결: 정치·군사관계의 변질과 경제지원의 확대

1994년 10월 미·북한간 제네바 핵기본합의가 중·북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붕괴와 한·소수교, 한·중수교로 인하여 조성된 국제고립을 타개하고 경제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던 북한의 입장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불안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사회주의국가의 민주화를 촉진시켜 세계 유일패권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하였던 미국의 입장이 절충되어 미·북한간 관계개선 문제에 대한

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가 도출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중·미간 세력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중수교 당시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는 바,⁸⁷⁾ 공식적으로는 동북아 및 한반도질서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북한 핵문제 타결과 미·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미·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는 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지를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다.

미·북 관계개선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세력범위내에 묶어 두려 하는 한편, 한국과의 정치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행보를 견제하려 하였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보를 보장받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과 북한의 이중적인 정책은 양국 관계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치·외교면에서 중·북한관계에 변화가 야기되었는데, 북한의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 철수 요구, 중국의 4자회담 참여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 鄧小平 사망시 북한의 애도기간 미설정 및 북한의 대대만 관계개선 움직임 등을 통해서 중·북한간 정치·외교관계 소원화 징후가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군사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군사·안보적 협력을 과시하였지만, 판문점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 철수와 중·북한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

87) “中韓建交意義重大,” 「文匯報」, 1992. 8. 24.

조조약」중 자동개입조항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입장 그리고 1950년 한국전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재평가 움직임은 중·북한간 군사관계가 더 이상 혈맹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었다. 1995년 이래 북한이 수재와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게 되어 체제존속의 위기를 맞게 되자 중국은 무상 식량원조와 원유 제공을 통해 북한에서 체제안정이 유지되도록 지원하였다. 1996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약 250만톤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에 제공된 식량이 50만톤을 상회하였는 바,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IV. 미·북관계 변화 이후 중·북관계 전망

1. 미·북관계 변화 전망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수출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관계개선 협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동결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제1기 경수로를 건설 중에 있는 등 1994년 제네바 합의가 큰 장애없이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4자회담과 미사일회담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조만간 미·북한간 관계개선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전세계에 확산시키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⁸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감축·생산중단과 대남 군사위협 제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정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경제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이에 따른 군사력 증강 압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88)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혼란이 동북아지역 질서안정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는 바,⁸⁹⁾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도라고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북한의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미·북한간 관계발전은 단지 시기의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세기내에 미국과 북한간에 전면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EDO가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경수로 공사 완공시기와 북한의 잔류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철거시기가 2005년 경으로 예상되고 있고, 북한이 자본주의 사상 침투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동아시아지역 주둔 미군 10만명을 2010년경까지 계속 잔류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북한간 국교정상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2000년 이후에 가서나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⁹⁰⁾ 향후 2~3년 이내 미·북한관계가 연락사무소나 무역대표부 개설단계 이상으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9)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북한의 국가역량을 군사비 유지·증강에 소모하게 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단마르크 사회민주당 위원장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03.

90) 1970년대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2년 중·미가 「上海공동선언」을 통해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1년여만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고, 그 후 6년만에 비로소 중·미간 국교가 수립되었다. 중·미간 국교정상화 과정에 대해서는 琴喜淵, “美國與中共關係正常化之研究,” 國立政治大學外交研究所碩士論文, 1984, pp. 77~175;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33~81 참조. 김국신 박사도 미·북관계 정상화가 2001년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국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72~78.

그러나 연락사무소와 무역대표부는 대체적으로 대사관이 담당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바, 미·북한간 연락사무소나 무역대표부 개설시 양국간 다방면에 걸친 접촉과 교류가 증대될 것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재원조달 문제로 KEDO와 같은 형태의 국제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미 해외 현지법인의 대북투자 허용, 대북 수출허용품목 확대, 선박·전세기의 대북입국 허용,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등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이며,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동결, 미사일 생산·수출 중단, 생화학무기 감축문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미·북한간 연락사무소·무역대표부 개설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이 지역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북한내 일본인 처의 송환문제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타결짓고 대북 수교교섭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보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자신의 체제변화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일수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게 있어서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1970년대 초반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낮고 일·북한관계가 한·미·일 공조체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북한간 국교정상화는 중·일 국교정상화 과정과 달리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⁹¹⁾

2. 중·북관계 전망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미·북한관계 변화는 중·북한관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기치를 내걸고 사유제 도입을 적극화하려는 중국의 江澤民 지도부는 미·북한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기존 북한에 대한 자신의 발언권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도 대미관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경제난을 해소하고 체제위협 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중국과 미국에 대한 등거리정책을 통해 실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북한관계 변화 이후 중·북한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북한체제가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단계

미·북한관계가 발전되더라도 중국과 북한은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체제변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단지 경제지원 유도과 주한미군 철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막대한 경제지원을

91) 일본은 1972년 2월 중·미가 「上海공동성명」을 통해 관계정상화 방침을 표명한 후 7개월만에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당시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었고, 광활한 중국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앞서 대중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미·북관계의 급진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북한간 관계는 상당기간 동안 연락사무소나 무역대표부 개설수준의 제한적인 수준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북한은 계속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인접국이며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대미 협력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대만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한 중국과 미국은 당분간 지역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997년 10월 江澤民 주석의 미국방문과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미관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미간 갈등국면 완화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이며, 북한의 대·중·미정책 변화 여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미관계의 완화는 어느 정도 중·북간 기존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이 미·북한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미 접근외교를 전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은 당총서기와 국가주석직 등을 정식 승계한 후 중국을 방문하여 江澤民, 李鵬, 胡錦濤 등과 접촉을 갖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전에 참전하여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遲浩田, 傅全有, 于永波, 王克 등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들도 정치국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군사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북한간 지리적 인접성도 양국간 유대관계를 유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1,350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순치관계」(脣齒關係)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해양세력의 대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안보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7년 9월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명문화하기로 한 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북한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⁹²⁾ 또한 국제적 고립 상황에 처한 북한도 인접한 중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정치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안정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변질을 유도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후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 압력을 가하고 민주화와 자유화의 바람을 전파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단지 대외고립 해소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추진하는 반면, 인접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갖게 될 수 있다.

92) 중국은 한반도사태와 대만해협사태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을 명문화하려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일본 자위대에게 한반도사태와 대만해협사태시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적용범위에 대만해협사태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張國成, “圍繞防衛範圍的論爭,” 「人民日報」, 1997. 8. 6; 趙階琦, “析美日中間報告,” 「世界知識」, 1997年 第13期 (1997. 7. 1), pp. 22~23; 劉文玉, “日美軍事合作的危險走勢,” 「文匯報」, 1997. 5. 2;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Chinese Apprehensions About Revitaliz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sian Survey*, Vol. 37, No. 4 (April 1997), pp. 383~402.

따라서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후에도 중국과 북한은 계속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추진하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물론 1997년 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사유제로 전환될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물자 지원 절차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동북삼성 지역내 국유기업들이 대북교역에서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북경의 중앙정부가 대북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폭을 적기에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물자공급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정부는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 도모차원에서 능력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북한과의 교역에서 청산결제 방식을 부분적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정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의 안보 및 경제 번영에 미칠수 있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특히 북한체제의 안정에 한반도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미·북연락사무소 개설단계에서도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중시하는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북한간 우호협력관계는 냉전시대에 유지되었던 혈맹적 우호협력관계에 비해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5차 당대회와 1998년 3월 제9기 全人大에서 선출될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 朱鎔基, 吳邦國, 李嵐清 등 경제문제를 전담하게 될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더욱 강조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정치·경제·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지만 북한의 모험을 우려하여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데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대미·일 무력충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한반도사태에 대해 소극적 개입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남북한간 현상유지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나. 미·북 관계정상화 단계

북한 핵동결, 경수로 건설사업, 중유제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등과 관련 미·북한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향후 2~3년내 미·북한간 연락사무소 또는 무역대표부 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2000년대 초에는 관계정상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초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경쟁으로 중·미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북한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되게 되면, 북한은 대중(對美) 편향정책을 전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미 어느 일방에 치우치는 정책 보다 중·미에 대한 등거리정책 채택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미에 대한 등거리정책을 통해 중·미 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유인하려 할 것이다.⁹³⁾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게 될 것인 바, 미·북한 관계개선 과정에서

93) 북한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유인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도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유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진영에 편향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과거 1960년대 중·소대립이 격화되었던 시기에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에 대해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했던 것과 같이,⁹⁴⁾ 미·북한관계의 급격한 변화시점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초 중국의 경제규모가 대폭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 협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 군대가 한반도 38도선을 월경하여 북한영내로 진격하는 상황을 수용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1997년 9월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대해서도,⁹⁵⁾ 중국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⁹⁶⁾ 중국의 경쟁국인 미·일이 한반도 사태에 깊숙히 개입하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명분하에 제2의 한국전과 같은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병력을 파병하는 경우에도 1950년 당시와는 달리 제한적인 군사력을 중·북한 변경지역까지만 파병하게 될 것

94) 1960년대 중·소가 공산주의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을 전개하였을 당시,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묶어 두기 위해 북한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진위, 「북방삼각관계」(서울: 법문사, 1985) 참조.

95) 미·일은 주변유사 범위에 한반도를 포함시키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전략물자 지원시 대련·남포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해에 대한 미·일의 경제봉쇄 조치는 중·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朝日新聞」, 1997. 9. 24.

96) 沈國放 중국의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문 참고. 「文匯報」, 1997. 9. 25.

으로 보인다. 21세기 중·미간 갈등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일 군사력의 38선 이북 진격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북관계 정상화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협력정책을 전개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간 관계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정치·안보관계 개선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안보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행보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주요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배려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중대 차원에서 대북관계를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중·북관계는 전략적 이익 공유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중국의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이 사유화되면,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시 아직 일부 시행되고 있는 청산결제 방식의 교역을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대북 수출상품에 대해 국제시장가격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경제가 단기간내에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도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할 것이다.⁹⁷⁾ 따라서 중·북한간 교역규모가 감

97) 중국공산당은 1997년 9월 15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유제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하였

소되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미·북관계가 연락사무소 개설단계에 진입할 경우 중·북간에는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북이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게 될 경우 중·북한관계는 자국의 '실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예상되는 중·북한관계 하에서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아래 <표 6>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표 6> 미·북관계 변화에 따른 중·북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미·북관계		연락사무소개설 단계	관계정상화 단계
중·북관계		우호협력관계	전략적 협력관계
중 국 의 대북정책	정 치 외교지원	지 원	소극 지원
	전략물자 제공	능력범위내 제공	전략적 필요시 제공
	무역방식	청산·현금결제, 우호·시장가격제 병용	현금결제, 시장가격제 적용
	유 사 시 개 입	한반도사태 악화 사전저지, 소극 개입	주변국 개입 저지, 주변국 개입시 개입
	한 반 도 일 통	흡수통일 불원, 현상유지 희망	현상유지, 자주·평화통일 지지

다. 따라서 21세기초 중국은 경제적 이익여부에 따라 모든 국가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정책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 『人民日報』, 1997. 9. 22.

V. 결 론

중국과 북한은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동유럽과 소련붕괴 이후 정권수립 이래 가장 심각한 체제변혁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동유럽과 소련의 파고는 동북아의 두 사회주의 국가인 중·북한간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체제변혁의 위기상황에 대한 서로 상이한 대응으로 중·북한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경제건설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구축하는데 대외정책의 중요한 비중을 두었다.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북한에게 중국의 ‘수정주의적’ 정책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중수교는 1950년 한국전 이래 지속되어 온 중·북한간 혈맹관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중수교 이후 중·북한간에 군사·경제면에서는 협력관계가 지속되었으나, 정치관계는 소원화될 수밖에 없었다.

1994년 미·북한간 관계개선 합의도 중·북한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정책을 대중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미·북한간 관계개선을 경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의 정치·안보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미·북한간 관계개선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려 하였다.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에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물자 지원은 증대되었으나, 중·북한간에는 정치·외교면에서 이견과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증대되었다.

미국이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북한도 경제난 해소와 국제고립 타개를 위해 대미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바, 향후 미·북한관계가 점차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3년 내에 미·북한관계가 연락사무소 또는 무역대표부 개설 수준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중·북한간에는 우호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지지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전략물자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북한 역시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북한관계가 장기적으로 국교 정상화 단계로 발전될 경우, 중·북한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대북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인 바, 전략적으로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해 전략물자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며, 대북 무역결제시 현금결제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개입할 경우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북한관계 개선과 이에 따른 중·북한관계 변화는 향후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안보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다. 미·북관계 개선은 남북한에 대한 한반도 주변4국의 교차승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대외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북한관계가 장기

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될 경우 한·중간 정치·안보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북한관계 변화는 한국에게 유리한 안보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북한관계 개선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관계 이완을 초래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고, 중·북한간 정치·군사관계 소원화는 중국채널을 통한 북한변화 유도정책 채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중·미의 영향력 확대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외교적으로 심각한 선택을 강요받게 할 것이다.

반면, 미·북관계 개선과 중·북관계 변화는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노골적으로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한반도의 조기 통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미·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붕괴가 지연될 수 있고, 중국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북관계 개선과 중·북관계 변화로 한반도의 급진통일은 곤란하게 될 것이지만,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일·중·러 등 주변 강대국들이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북관계 개선과 중·북관계 변화추세도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통일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미·북관계 개선과 중·북관계 변화추이를 주의깊게 관찰·분석하는 동시에, 이러한 주변정세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강원식 등.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국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문홍호. 「李鵬총리의 방한결과 분석과 대중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수용 가능성과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신상진, 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오승렬.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5.
- 杜攻 主編. 「轉換中的世界格局」.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2.
- 馮特君 主編. 「當代世界政治經濟與國際關係」.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
-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5.
- 「周恩來選集」, 上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 梁云彤 等. 「美國和平演變戰略」. 瀋陽: 吉林人民出版社, 1992.
- 解力夫. 「朝鮮戰爭實錄」, 上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四大以來重要文獻選編」. 北京: 人民出版社, 1995.
- 中國研究會 編. 「中國年鑑, 1996」. 東京: 新評論社, 1996.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政策研究室. 「中國外交, 1997」.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7.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鑑」. 北京: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1997.
- 楊昭全, 韓俊光. 「中朝關係簡史」.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 熊志勇. 「中國與美國」.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5.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Mack, Andrew. ed., *Asian Flashpoint: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St. Leonards: Allen & Unwin, 1993.

2. 논문

- 김태호. “북한의 대중·러 안보관계 현황과 전망.”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5. 12.
- 신상진. “사회주의 정치체제 변화: 중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산권연구」. 제3집. 1993. 1.
- 신상진.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동아시아에서 패권확보를 위한 대립.”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 朱建榮. “북한·중국관계의 특수성.” 「극동문제」. 1997년 4월호. 1994. 4.
- 한호석. “최근 북의 정세관과 정세대응에 대한 담론 분석.”

- WWW.POND.COM.
- 張雅君. “蘇聯變局對中共的衝擊: 危機效應的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4卷 第11期. 1991. 11.
- 段若非. “堅持人民民主專政,反對和防止和平演變.” 「人民日報」, 1991. 6. 5.
- 陸俊元. “朝鮮半島的地緣戰略結構及其演化.” 「現代國際關係」, 1996年 第9期. 1996. 9.
- 韋木. “中韓建交與東北亞局勢.” 「廣角鏡」, 1992年 9月號. 1992. 9.
- 邢世忠. “中國威脅論可以休矣.” 「求是」, 1996年 第3期. 1996. 2.
-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 王中人. “細勘中國威脅論.” 「世界知識」, 1997年 第12期. 1997. 6. 16.
- 趙階琦. “析美日中間報告.” 「世界知識」, 1997年 第13期. 1997. 7. 1.
- 華昕. “朝鮮核問題的前前後後.” 「世界知識」, 1994年 第10期. 1994. 5. 16.
- 羅冰. “中共軍方插手對美政策.”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 未羊. “中美關係的挫折和前景.” 「瞭望」, 1995年 第27期. 1995. 7. 3.
- 令狐衍. “美越建交-中美越新三角.” 「鏡報月刊」, 1995年 8月號. 1995. 8.
- 謝益顯. “對文明之衝突論的剖析.” 「國際問題研究」, 1994年 第2期. 1994. 4.
- 若林 敬子. “中國人口の12億突破は食糧問題に威脅か.” 「世界週報」, 1995. 3. 21.
- 金子秀敏. “中國から見た北朝鮮.” 「諸君」, 第27卷 第3號. 1995. 3.
- Christopher, Warren. “U.S. National Inte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Address before the National Press Club. July 28, 1995.
- Liu, Hong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November 1993.

- Chang, Parris H. "Deng's Last Stand on China's Reform M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the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 Garrett, Banning and Bonnie Glaser. "Chinese Apprehensions About Revitaliz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sian Survey*. Vol. 37, No. 4. April 1997.
- Chanda, Nayan and Lincoln Kaye. "Circling Hawk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7, 1993.
-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Summer 1997.
- Sutter, Robert G. "Korea: Improve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 Motives and Implications." 「연합통신」, 1996. 3. 2.
- Wang, Jisi. "Civilizations: Clash or Fusion?" *Beijing Review*. January 15~21, 1996.
- Wang, Dajun and Jiang Ye. "The Nuclear Issue of the DPRK." *Beijing Review*. July 4~10, 1994.
- Yi, Xiaoxiung. "China's North Korea Policy: A Waiting Game."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문. 1997. 9. 24.
- Zhao, Gancheng. "China's Korea Unification Policy."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by Kyungnam University and American University. Seoul Hilton Hotel. May 22~23, 1996.

3. 기타

「로동신문」.

「중앙방송」.

「내외통신」.

「연합통신」.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간 북한동향」.

「人民日報」.

「文匯報」(香港).

「日本經濟新聞」.

「每日新聞」.

Beijing Revie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Japan Times.

最近 發刊資料 案内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5,7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4,5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5,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5,5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4,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